

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Regional Income Inequality: The effects of Finance and real estate assets

김성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해 추세를 파악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문제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에 올바른 효과(소득불균형 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 지역의 총소득격차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서 79% 사이로 지역 내 불균형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양상이 매우 다르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이며, 금융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역으로는 강원, 충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단순히 고용정책을 통해 해소하거나 전국 차원에서 자산소득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불균형 지표를 하향안정화하기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요어: 소득불균형, 지역 내·지역 간 격차, 지니계수 분해,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수료(ksj7@snu.ac.kr)

1. 들어가는 글

사회적으로 계층 간 갈등문제는 경제가 고도 성장세에 있는 경우보다 안정적 성장세 또는 저성장세일 경우에 더욱 심화되고 부각되곤 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갈등문제는 주로 소득의 불균형(inequality) 및 격차(Disparity)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계층 간 소득증가의 방향과 속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누적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계층별 소득의 규모를 감안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매년 동일하게 10%씩 증가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10%보다 훨씬 급격하게 확대된다. 2006년 2분기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24배로, 2000년 이후 6년 만에 소득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외환위기 당시 최고의 소득격차를 기록했던 5.49배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불균형의 수준을 논할 때 주로 소득 측면의 불균형을 측정하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가구나 개인 차원에서도 ‘성장’을 대표하는 지표가 소득이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양극화(Bi-Polarization)’ 개념도 본래 ‘중산층의 소멸(Wolfson, 1994)’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계층을 저소득계층 - 중간소득계층 - 고소득계층으로 분류한다는 전제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10분위 소득계층 및 5분위 소득계층의 소득격차 확대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

소득계층의 불균형 또는 격차는 각 지역 내 계층구조에 의한 차이이며, 공간적 격차는 가구가 각기 다른 소득평균을 가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로, 계층 간의 격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에 의한 격차는 남게 된다(Branko Milanovic, 1999).²⁾ 소득양극화 논의에서도 마

1)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 소득불균형과 소득격차를 혼용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는 ‘소득분배가 고르지 않다’, ‘소득분배가 편향되고 있다’라는 선상에서 동일하게 이해하기로 한다. 대체로 지역 내, 지역 간 소득분배의 고르지 않음을 이해하는 데는 ‘소득격차’로, 또 단위별·소득항목별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소득불균형’으로 표현했다.

2) 정윤희·김의준(2001: 1176)에서 재인용.

찬가지로 ‘공간구조에 의한 격차’ 논의가 함께 제기된다. 산업구조의 재편과정, 즉 도시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연구 분야 등 지식기반형 산업이 주도하면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소매, 음식, 청소, 경비 등)으로 대비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적 이중성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소비 및 여가창출의 공간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공간구조’를 동반하게 된다(Castells, 1989). 더 나아가 미국 대도시권(New York State)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Between Up-state and Down-state)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공간구조에 의해 근로소득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Kim, 2006).

불균형 및 격차와 관련된 연구들은 격차의 시간적 변화 추이, 격차의 공간적 대비(행정단위의 지역격차 비교: Kim and Jeong, 2003; 권일·류상규, 2005; 성현근·김혜자, 2006 등), 격차의 계층 간 대비(소득분위별 격차의 비교: 윤주현 외, 2005; 삼성경제연구소, 2006; 봉인식, 2006 등),³⁾ 격차를 심화 또는 완화시키는 요인(격차유발 요인: Fujita and Hu, 2001; Kim, Hong and Ha, 2003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소득격차 또는 소득양극화의 확대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자산소득(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그 요인으로 분석한다(Kim and Jeong, 2003; 김의준, 2003;⁴⁾ 한국은행, 2006;⁵⁾ 신동균, 2007

3) 특히 윤주현(2005)의 연구는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1)」에서 각각 양적, 질적, 주거비 부담, 주거안정성, 주거 형평성 지표로 분류해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소득수준별 주거 서비스 격차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득중심의 양극화 개념보다는 소득계층별 주택점유 형태, 주거 서비스 격차의 심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4) 김과 정(Kim and Jeong, 2003)과 김의준(2003)의 연구는 모두 대우패널의 자료를 통해 1995년의 우리나라 소득격차를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분해한 후 소득원천별로 소득불균형의 요인을 분석해 우리나라 소득격차의 요인이 주로 지역 간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과 그 이외의 권역 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자산소득으로 인해 불균형이 더욱 커진다는 점 등을 실증분석했다.

5) 한국은행(2006)의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7차에 걸친 노동패널을 이용해 전국, 경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고, 소득항목별로 영향력

에서 재인용⁶⁾). 한편 소득격차는 집단의 분류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분해될 수 있다. 직업 간 격차+직업 내 격차, 연령 간 격차+연령 내 격차, 학력 간 격차+학력 내 격차, 지역 간 격차+지역 내 격차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집단 간 또는 집단 내 불균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로는 각 도별(도에 소재한 광역시는 제외) 불균형 수준을 추정하고, 시간적으로는 1999년부터 2005년⁷⁾까지 각 연도별 불균형 추이를 살펴보고, 또 소득항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공간적인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동시에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며, 나아가 소득항목별⁸⁾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방법론적으로는 다금(Dagum, 1997)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지니계수를 분해(decompose)함으로써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를 비교해 소득항목별로 지니계수를 추정해 불균형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를 파악할 때 지역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느냐에 따라 지역격차가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임의적 지역구분에 의한 지역격차의 왜곡문제를 해결해준다.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 분석하든지 비교적 동일한 결과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을 비교분석해 2001년 이후 부동산소득(비근로소득)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 6) 리와 신(Lee and Shin, 2007)의 연구에서는 양극화 진전이 주로 비근로소득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부동산 소득의 양극화 심화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한다.
- 7) 노동패널 9차(2006년)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식적인 공표는 2008년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자료는 8차년도(2005년)까지로 한정했다.
- 8)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한국은행(2002)의 연구에서는 총소득 기준으로 양극화 추세를 분석했으나 소득항목별 비중만을 비교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추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2. 지니계수 분해

최근의 연구방법론들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계층 간 갈등, 지역 또는 집단 간 갈등양상의 확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불균형 측정지표에서 개선된, 분해된 지니계수, 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이 개발되고 그를 통해 집단 내 및 집단 간 갈등양상과 중산층의 비중변화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지수에 근거해 사회갈등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신동균, 2007).

소득격차는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격차로 불균형지수의 분해를 통해 각각 표현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집단 내 및 집단 간 격차는 주로 엔트로피지수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집단 간 격차가 각 집단의 평균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단 간 격차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agum, 1997), Dagum의 지니계수 분해법을 이용한 집단 내, 집단 간 격차에 관한 연구에서 엔트로피지수의 분해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Mussard, et al., 2003; Nembua, 2006).⁹⁾

일반적인 (상대)지니계수는 아래 식(1)과 같이 계산된다.

$$G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dots\dots\dots (1)$$

인구규모가 n_i 이고, i 번째 사람의 소득을 y_i 라 하고, 이들이 지닌 소득의 평균을 μ 라고 한다면 지니계수는 식(1)과 같이 계산되며, 다음

9) 엔트로피지수와는 달리 지니계수 분해과정상 식에서 대인적 관계를 이용해 집단 간 분포의 상이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현곤·김혜자(2006: 37~38).

(Dagum, 1997)이 제시한 지니계수 분해과정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¹⁰⁾

전국이 k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아래 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G = \frac{1}{2 n^2 \mu} \sum_{j=1}^k \sum_{h=1}^k \sum_{i=1}^{n_j} \sum_{r=1}^{n_h} |y_{ji} - y_{hr}| \dots\dots\dots (2)$$

또 j지역의 지역 내 지니계수는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j지역과 h지역의 지역 간 지니계수는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_{jj} = \frac{1}{2 n_j^2 \mu_j} \sum_{i=1}^{n_j} \sum_{r=1}^{n_j} |y_{ji} - y_{jr}| \dots\dots\dots (3)$$

$$G_{jh} = \frac{1}{n_j n_h (\mu_j + \mu_h)} \sum_{i=1}^{n_j} \sum_{r=1}^{n_h} |y_{ji} - y_{hr}| \dots\dots (4)$$

식(3)과 (4)를 바탕으로 j지역의 상대적인 (인구)규모와 상대적인 (소득) 규모를 각각 $p_j = (\frac{n_j}{n})$, $s_j = (\frac{n \mu_j}{n \mu})$ 라 하면, 전체 지역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는 식(5)와 같이 집단 내 지니계수(G_w)와 집단 간 지니계수(G_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집단 내 지니계수는 식(6), 집단 간 지니계수는 식(7)로 표현할 수 있다.

10) 정윤희·김의준(2001), 성현곤·김혜자(2006)의 연구에서 지니계수 분해법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급(Dagum, 1997)의 연구는 물론 위의 두 연구를 참고해 지니계수의 분해과정을 재정리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급(Dagum, 1997)이 제시한 지역 간 지니계수에서 교차변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교차변이요인을 분류해 산출된 지역 간 지니계수의 추이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G = G_w + G_b \dots\dots\dots (5)$$

$$G_w = \sum_{j=1}^k G_{jj} p_j s_j \dots\dots\dots (6)$$

$$G_b = \sum_{j=2}^k \sum_{h=1}^{j-1} G_{jh} (p_j s_h + p_h s_j) \dots\dots\dots (7)$$

지역 내, 지역 간으로 분해되는 지니계수는 계층 간 격차, 공간적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역 내 격차는 그 지역에 속한 가구 간의 소득차에서 기인하며, 지역 간 격차는 각 지역 간의 평균소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차를 의미한다.

3. 분석 자료

1) 노동 패널

현재 소득과 관련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대체로 통계청의 센서스,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 실태조사, 농가경제통계,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등이다. 이 중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볼 때 1998년부터 매년 조사·구축되고 있다는 점, 지역별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불균형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 내, 지역 간 소득불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가처분소득이라는 점에서 우수하다. 다만 지역별로 구분해 관련 지수를 추정할 때 표본의 수가 감소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별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의 의의가 있다. 노동패널은 원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했기 때문에 표본 수가 감소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최근까지도 76% 이

<표 1> 노동패널 1~9차년 조사 결과 비교

	조사성공 가구 수	원표본 가구 수	표본유지율	가구원 수
1차(1998)	5,000	5,000	100.0	13,321
2차(1999)	4,509	4,379	87.6	12,042
3차(2000)	4,267	4,045	80.9	11,206
4차(2001)	4,248	3,865	77.3	11,051
5차(2002)	4,298	3,798	76.0	10,966
6차(2003)	4,592	3,862	77.2	11,543
7차(2004)	4,762	3,863	77.3	11,661
8차(2005)	4,850	3,823	76.5	11,580
9차(2006)	5,002	-	76.5	11,75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상의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나타내 지난 6년 동안 표본유지율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노동패널¹¹⁾의 소득자료는 전년도 조사 소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득년도는 전부 소득귀속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도) 자료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소득으로 구축되어 있어 노동패널 2차년도(1999년도) 자료의 소득과 어느 정도 중복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가구용 패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노동패널이 고용상태와 연계해 소득 분배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표본지역이 도시지역 거주가구로 한정¹²⁾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전국의 도시지역 가구 중 5,000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해 추적 조사한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매년 4~9월 사이에 면접 및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12) 도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범위에 각 도에 소재한 광역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 표 2 > 지역별 조사기구 및 비중

(단위: 가구, %)

	2차년 (1999)	3차년 (2000)	4차년 (2001)	5차년 (2002)	6차년 (2003)	7차년 (2004)	8차년 (2005)
전국	4,508	4,142	4,114	4,298	4,592	4,620	4,850
경기	818 (18.15)	754 (18.20)	737 (17.91)	758 (17.6)4	893 (19.45)	1,009 (21.84)	1,044 (21.53)
강원	116 (2.57)	116 (2.80)	101 (2.46)	97 (2.26)	103 (2.24)	104 (2.25)	116 (2.39)
충북	98 (2.17)	93 (2.25)	99 (2.41)	98 (2.28)	99 (2.16)	100 (2.16)	108 (2.23)
충남	128 (2.84)	126 (3.04)	127 (3.09)	134 (3.12)	140 (3.05)	151 (3.27)	160 (3.30)
전북	185 (4.10)	165 (3.98)	194 (4.72)	193 (4.49)	197 (4.29)	199 (4.31)	198 (4.08)
전남	133 (2.95)	131 (3.16)	139 (3.38)	148 (3.44)	142 (3.09)	146 (3.16)	141 (2.91)
경북	250 (5.55)	232 (5.60)	240 (5.83)	236 (5.49)	260 (5.66)	261 (5.65)	263 (5.42)
경남	267 (5.92)	281 (6.78)	298 (7.24)	296 (6.89)	295 (6.42)	306 (6.62)	312 (6.43)

2) 소득의 구성과 조정

총소득은 <표 3>과 같이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 이전소득별로 구분해 격차 및 양극화 지수를 산출해 비교했다. 다만 지역별 소득의 자료 수 한계로 총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을 순서대로 제외하면서 관련 지수를 도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공적 이전소득이라 함은 이전소득의 세부내용 중에서 친척·친지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을 제외한 이전소득을 의미한다.

소득항목별 불균형 수준을 파악할 때에는 각 소득항목별 지니계수를 산정하지 않고 총소득에서 각 소득항목을 순서대로 차감한 후의 소득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산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지니계수를 산정할 때 겪

< 표 3 >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분류

소득 분류	세부내용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 봉급, 자영업 소득 포함
금융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1회 수급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정부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 및 상속, 기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는 자료 수의 감소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노동패널의 분석대상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가구단위의 가구구성원에 따른 가구소득의 조정을 실시했다. 미켈레 코스타와 클라우디오 미켈리니(Michele Costa and Claudio Michelini, 1999)에 의하면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석하는 경우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구성된 가구가 동일한 명목소득을 가진 경우 가구원당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산 또는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이용해 가구소득을 조정해 가구구성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정윤화·김의준, 2001: 1174에서 재인용).

가구구성원의 차별적 효과(the composition effects from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 식의 동등화 탄력성(equivalence elasticity: E)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text{Adjusted Income} = \text{Income} / \text{household size}^E \dots\dots\dots (8)^{13}$$

김과 정(Kim and Jeong, 2003)은 현진권·강석훈(1997)이 사용한 E값 0.50

13) Kim and Jeong(2003: 143).

<표 4> 지역(도)별 1998~2004년 소득불균형 수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지니계수	0.3824	0.4845	0.3974	0.4348	0.4131	0.4874	0.4003	0.3567

<표 5> 지역 내, 지역 간 지니계수 분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도) 지니	0.4027	0.4143	0.4086	0.4151	0.4020	0.4213	0.4101
지역 내 지니	0.0885 (21.97)	0.0860 (20.75)	0.0860 (21.04)	0.0896 (21.59)	0.0922 (22.94)	0.1114 (26.44)	0.1084 (26.42)
지역 간 지니	0.3142 (78.03)	0.3283 (79.25)	0.3227 (78.96)	0.3254 (78.41)	0.3098 (77.06)	0.3099 (73.56)	0.3018 (73.58)

와 애스킨슨·레인워터스·미들링(Athkinson, Rainwater, and Smeedling, 1995)이 사용한 값 0.54 중 0.50를 이용해 가구원 수에 따른 동등화지수를 가구소득의 조정에 활용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과 정(2003)의 가구원 수에 따른 동등화지수¹⁴⁾를 사용해 분석하기로 한다.

4. 지역 내 및 지역 간 소득격차

노동패널의 조사기간 동안(1999~2005년) 모든 지역(도)의 소득불균형 수준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0.4874)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0.3567)로 파악되었다.

소득불균형이 높은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남(0.4873) > 강원(0.4845) > 충남(0.4348) > 전북(0.4131) > 경북(0.4003) > 충북(0.3974) > 경기(0.3824) > 경남(0.3567) 순으로 나타난다.

14) 가구원 수에 따른 동등화지수

가구원 수	1	2	3	4	5
동등화지수	1.00	0.71	0.58	0.50	0.45

<표 6> 도별 지역 내 소득격차 변화 추이

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도)	0.4027 (100.00)	0.4143 (100.00)	0.4086 (100.00)	0.4151 (100.00)	0.4020 (100.00)	0.4213 (100.00)	0.4101 (100.00)
지역 내	0.0885 (21.97)	0.0860 (20.75)	0.0860 (21.04)	0.0896 (21.59)	0.0922 (22.94)	0.1114 (26.44)	0.1084 (26.42)
경기도	0.0679 (16.85)	0.0638 (15.41)	0.0613 (15.00)	0.0661 (15.93)	0.0723 (17.99)	0.0931 (22.11)	0.0909 (22.15)
강원도	0.0018 (0.45)	0.0030 (0.73)	0.0009 (0.21)	0.0010 (0.23)	0.0011 (0.28)	0.0006 (0.14)	0.0007 (0.17)
충청북도	0.0009 (0.21)	0.0014 (0.34)	0.0009 (0.22)	0.0009 (0.21)	0.0009 (0.24)	0.0007 (0.16)	0.0008 (0.19)
충청남도	0.0015 (0.38)	0.0013 (0.32)	0.0017 (0.42)	0.0014 (0.33)	0.0017 (0.42)	0.0017 (0.41)	0.0014 (0.35)
전라북도	0.0034 (0.84)	0.0024 (0.59)	0.0040 (0.98)	0.0039 (0.93)	0.0033 (0.83)	0.0025 (0.60)	0.0025 (0.60)
전라남도	0.0026 (0.64)	0.0023 (0.55)	0.0030 (0.73)	0.0031 (0.76)	0.0019 (0.47)	0.0021 (0.50)	0.0020 (0.48)
경상북도	0.0042 (1.05)	0.0040 (0.96)	0.0051 (1.25)	0.0049 (1.17)	0.0039 (0.98)	0.0037 (0.89)	0.0045 (1.11)
경상남도	0.0062 (1.55)	0.0077 (1.86)	0.0091 (2.24)	0.0085 (2.04)	0.0070 (1.73)	0.0069 (1.63)	0.0056 (1.36)

전체 소득격차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도)의 지역 내 격차 기여분과 각 지역의 지역 간 격차 기여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도 지역 전체 총소득의 지니계수를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분해하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김의준(2003)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격차에 비해 지역 간 격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역 간 소득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다(기여도 77~79%대), 2002년부터 완화되는(기여도 73%대) 추세다. 반면 지역 내 소득격차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2004년 26%대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표 7> 도별 지역 간 소득격차 변화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기 - 강원	0.0227 (5.64)	0.0302 (7.28)	0.0148 (3.63)	0.0168 (4.06)	0.0187 (4.65)	0.0164 (3.88)	0.0174 (4.23)
경기 - 충북	0.0154 (3.83)	0.0193 (4.67)	0.0150 (3.67)	0.0156 (3.77)	0.0167 (4.15)	0.0164 (3.89)	0.0172 (4.18)
경기 - 충남	0.0225 (5.58)	0.0201 (4.86)	0.0219 (5.35)	0.0206 (4.96)	0.0240 (5.96)	0.0265 (6.30)	0.0242 (5.91)
경기 - 전북	0.0306 (7.61)	0.0262 (6.31)	0.0324 (7.93)	0.0331 (7.98)	0.0325 (8.09)	0.0322 (7.65)	0.0313 (7.63)
경기 - 전남	0.0276 (6.86)	0.0249 (6.00)	0.0275 (6.74)	0.0297 (7.16)	0.0239 (5.95)	0.0286 (6.78)	0.0272 (6.64)
경기 - 경북	0.0370 (9.18)	0.0349 (8.42)	0.0371 (9.08)	0.0385 (9.29)	0.0388 (9.65)	0.0417 (9.90)	0.0431 (10.51)
경기 - 경남	0.0414 (10.29)	0.0450 (10.87)	0.0478 (11.69)	0.0484 (11.66)	0.0462 (11.50)	0.0525 (12.46)	0.0482 (11.76)
강원 - 충북	0.0026 (0.64)	0.0042 (1.01)	0.0018 (0.43)	0.0020 (0.47)	0.0021 (0.53)	0.0013 (0.32)	0.0015 (0.38)
강원 - 충남	0.0035 (0.87)	0.0046 (1.12)	0.0024 (0.60)	0.0024 (0.59)	0.0029 (0.72)	0.0021 (0.49)	0.0020 (0.50)
강원 - 전북	0.0050 (1.24)	0.0061 (1.46)	0.0037 (0.91)	0.0040 (0.96)	0.0040 (1.00)	0.0025 (0.59)	0.0027 (0.65)
강원 - 전남	0.0044 (1.09)	0.0056 (1.34)	0.0032 (0.79)	0.0035 (0.84)	0.0030 (0.75)	0.0024 (0.57)	0.0025 (0.62)
강원 - 경북	0.0059 (1.47)	0.0081 (1.96)	0.0042 (1.03)	0.0045 (1.09)	0.0047 (1.18)	0.0030 (0.72)	0.0036 (0.88)
강원 - 경남	0.0069 (1.71)	0.0107 (2.59)	0.0057 (1.38)	0.0061 (1.46)	0.0059 (1.46)	0.0043 (1.02)	0.0041 (1.00)
충북 - 충남	0.0024 (0.61)	0.0030 (0.72)	0.0025 (0.62)	0.0023 (0.54)	0.0027 (0.66)	0.0022 (0.53)	0.0022 (0.53)
충북 - 전북	0.0034 (0.85)	0.0039 (0.94)	0.0038 (0.93)	0.0038 (0.90)	0.0036 (0.90)	0.0027 (0.63)	0.0028 (0.69)
충북 - 전남	0.0031 (0.78)	0.0036 (0.87)	0.0033 (0.82)	0.0035 (0.83)	0.0027 (0.67)	0.0025 (0.59)	0.0026 (0.63)
충북 - 경북	0.0040 (1.00)	0.0053 (1.27)	0.0044 (1.07)	0.0043 (1.03)	0.0043 (1.06)	0.0034 (0.80)	0.0039 (0.94)

충북 - 경남	0.0047 (1.16)	0.0068 (1.64)	0.0057 (1.40)	0.0055 (1.32)	0.0052 (1.30)	0.0044 (1.04)	0.0042 (1.03)
충남 - 전북	0.0047 (1.18)	0.0036 (0.87)	0.0053 (1.29)	0.0047 (1.13)	0.0048 (1.20)	0.0042 (1.00)	0.0038 (0.92)
충남 - 전남	0.0043 (1.07)	0.0037 (0.88)	0.0047 (1.15)	0.0044 (1.06)	0.0037 (0.91)	0.0039 (0.93)	0.0036 (0.87)
충남 - 경북	0.0052 (1.29)	0.0046 (1.11)	0.0059 (1.45)	0.0051 (1.24)	0.0053 (1.32)	0.0052 (1.24)	0.0051 (1.25)
충남 - 경남	0.0067 (1.67)	0.0069 (1.66)	0.0082 (2.01)	0.0070 (1.69)	0.0072 (1.80)	0.0071 (1.69)	0.0058 (1.41)
전북 - 전남	0.0061 (1.52)	0.0048 (1.17)	0.0070 (1.72)	0.0071 (1.71)	0.0051 (1.26)	0.0048 (1.14)	0.0046 (1.12)
전북 - 경북	0.0078 (1.94)	0.0063 (1.52)	0.0091 (2.23)	0.0088 (2.12)	0.0075 (1.86)	0.0062 (1.48)	0.0067 (1.64)
전북 - 경남	0.0093 (2.30)	0.0090 (2.17)	0.0123 (3.01)	0.0116 (2.80)	0.0099 (2.45)	0.0085 (2.03)	0.0076 (1.85)
전남 - 경북	0.0074 (1.84)	0.0064 (1.55)	0.0081 (1.98)	0.0082 (1.97)	0.0058 (1.45)	0.0061 (1.44)	0.0062 (1.52)
전남 - 경남	0.0085 (2.10)	0.0086 (2.09)	0.0107 (2.61)	0.0107 (2.58)	0.0074 (1.83)	0.0078 (1.86)	0.0070 (1.72)
경북 - 경남	0.0110 (2.73)	0.0119 (2.88)	0.0140 (3.43)	0.0133 (3.19)	0.0113 (2.82)	0.0109 (2.59)	0.0104 (2.55)

도별 지역 내 소득격차의 경우 소득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005년(2004년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0909(전체 지니계수의 22.15%)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역 내 소득격차와 비교해볼 때 다른 지역의 지역 내 소득격차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¹⁵⁾

시계열별로 경기도의 지역 내 소득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의 지역 내 격차수준은 2003년 이후 감소되고 있다.

15) 노동패널은 경기도 및 서울시에서 시별 및 구별로 확률표본추출에 따라 세분화해 조사되지 않고 도 단위, 광역시 단위로 조사되므로 공간적 범위를 세분화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표 8 >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순증감 비중 변화 추이

소득계층별 순자산 증가	2/4		3/4		4/4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
1분위(하위 20%)	37.6	55.3	36.6	51.4	26.2	59.5
2분위	41.1	36.6	26.9	53.8	13.5	71.2
3분위	36.4	39.0	27.5	50.7	35.3	41.2
4분위	36.7	55.1	26.3	60.5	23.8	52.4
5분위(상위 20%)	36.0	40.0	41.4	34.5	36.0	52.0

8개 지역의 지역 간 소득격차는 대체로 경기지역과 비경기지역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경기-경북, 경기-경남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동일 권역 내에서는 경북-경남의 지역 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전북-전남과 충북-충남의 순으로 소득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별 소득항목별 소득불균형

1) 경기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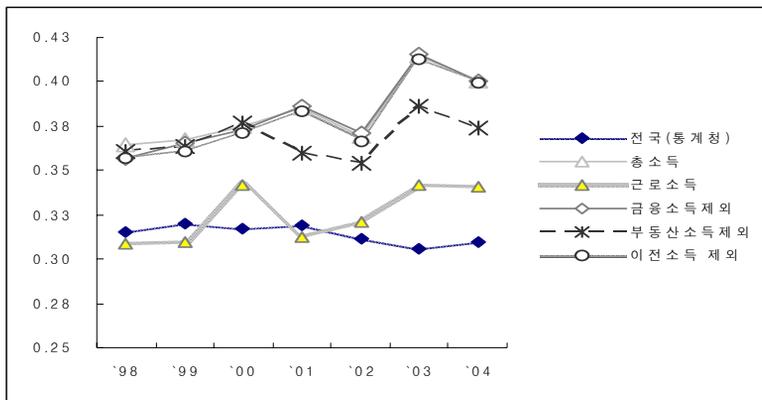
노동패널의 7년간 경기도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전국총소득의 지니계수와 비교해볼 때 훨씬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며 그 추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소득항목별로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며 정부의 공적보조금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는 부동산소득이 총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융소득은 2000년 이전에는 총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오히려 총소득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표 9> 경기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⁶⁾	기타소득 제외
98년	0.3646	0.3085	0.3571	0.3603	0.3568	0.3519
99년	0.3673	0.3095	0.3653	0.3634	0.3608	0.3500
00년	0.3741	0.3420	0.3728	0.3764	0.3706	0.3702
01년	0.3853	0.3127	0.3863	0.3600	0.3833	0.3779
02년	0.3693	0.3206	0.3715	0.3538	0.3667	0.3669
03년	0.4148	0.3418	0.4155	0.3866	0.4125	0.4101
04년	0.4000	0.3410	0.4008	0.3736	0.3994	0.3926

<그림 1> 경기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소득)과 부동산자산(소득)의 보유 비중 및 증가 비중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태도조사¹⁷⁾ 자료에 따르면, 하위 1분위 또는 2분위 소득계층의 금융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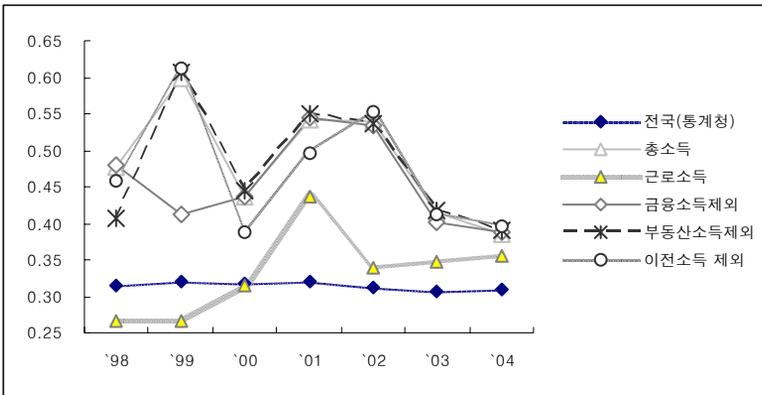
16)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경우는 당초 정책 대상 계층에게 보조금 혜택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별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재차 확인되어야 한다.

17) 삼성경제연구소는 1991년부터 소비자태도조사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증감을 묻는 항목은 2007년 2분기부터 실시되었다.

< 표 10 > 강원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4763	0.2668	0.4792	0.4066	0.4593	0.4516
99년	0.5986	0.2652	0.4110	0.6071	0.6115	0.5685
00년	0.4373	0.3158	0.4363	0.4432	0.3867	0.4015
01년	0.5416	0.4351	0.5439	0.5497	0.4956	0.5299
02년	0.5379	0.3394	0.5350	0.5357	0.5538	0.5435
03년	0.4155	0.3474	0.4001	0.4166	0.4117	0.4155
04년	0.3843	0.3541	0.3878	0.3893	0.3966	0.3843

< 그림 2 > 강원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을 통한 순자산 증가 비중이 4분위 또는 5분위 소득계층의 증가 비중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금융자산의 투자 및 보유가 보편화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자산의 경우 다양한 소득계층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자산과 비교된다.

정부의 공적 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는 일부 다른 지역(도)¹⁸⁾에서 공적 보조금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반된다. 즉, 공적

보조금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책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강원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강원도의 소득불균형은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도 이어 매우 높은 수준의 지니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소득 중에서 금융소득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부동산소득의 경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효과가 불분명하다(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남).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불균형 완화효과 역시 불분명하게 나타났다(1999, 2002, 2004년에 완화효과).

3) 충청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충청북도의 소득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화패턴을 나타낸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소득불균형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수준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은 소득불균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금융소득에 비해 부동산소득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보조금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완화 효과는 2001년까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 소득불균형 완화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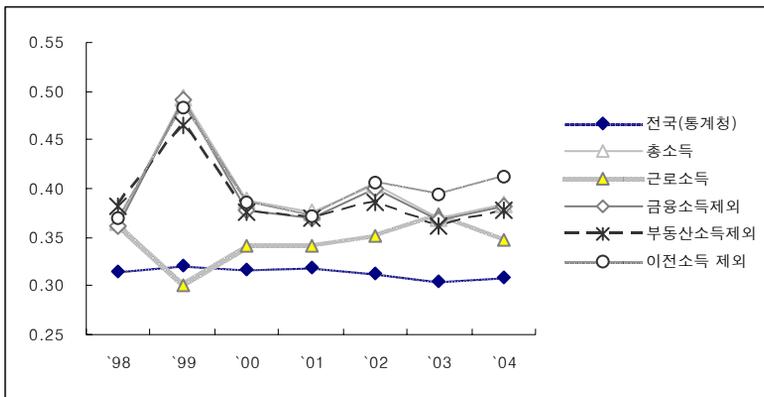
4) 충청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충청북도의 소득불균형 수준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 수

< 표 11 > 충청북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3660	0.3654	0.3606	0.3825	0.3692	0.3701
99년	0.4939	0.3015	0.4912	0.4657	0.4827	0.3813
00년	0.3883	0.3406	0.3784	0.3753	0.3849	0.3878
01년	0.3754	0.3422	0.3694	0.3701	0.3707	0.3763
02년	0.4043	0.3504	0.3991	0.3853	0.4053	0.3938
03년	0.3703	0.3737	0.3672	0.3610	0.3933	0.3731
04년	0.3835	0.3473	0.3813	0.3784	0.4120	0.3537

< 그림 3 > 충청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준이 좀 더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총소득의 소득불균형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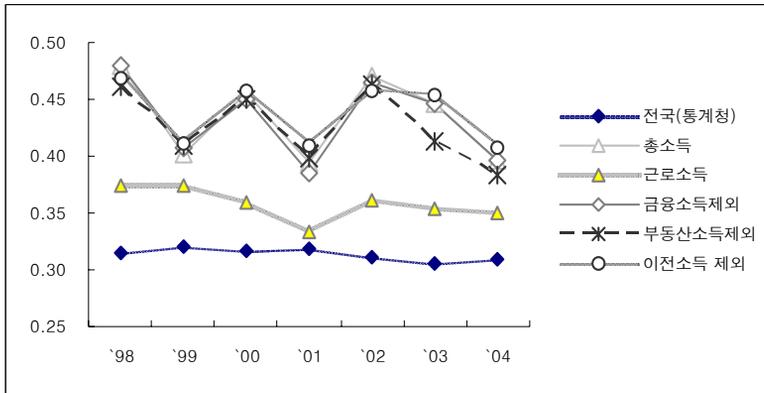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은 전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소득에 비해 부동산소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 보조금은 1998년과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표 12 > 충청남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4795	0.3742	0.4787	0.4606	0.4679	0.4402
99년	0.4022	0.3736	0.4074	0.4092	0.4109	0.4000
00년	0.4550	0.3600	0.4508	0.4506	0.4570	0.4327
01년	0.3939	0.3329	0.3850	0.3978	0.4085	0.3895
02년	0.4702	0.3618	0.4653	0.4628	0.4579	0.4385
03년	0.4469	0.3539	0.4464	0.4121	0.4533	0.4387
04년	0.3962	0.3500	0.3958	0.3835	0.4076	0.3914

< 그림 4 > 충청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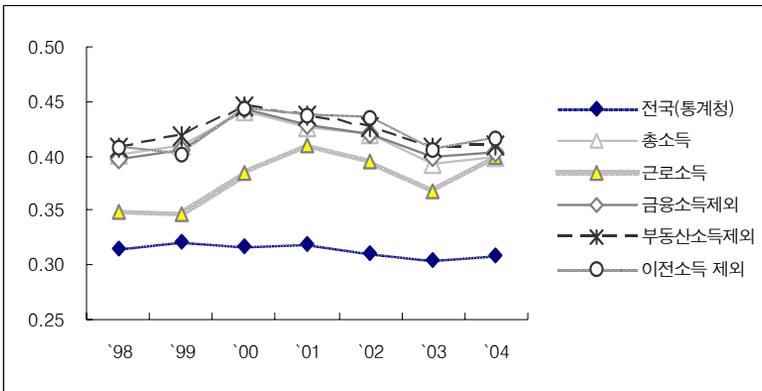
5) 전라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전라북도의 전체 소득불균형 수준은 2000년 0.4403의 지니계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른 도 지역과 비교하면 부동산 소득이 전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7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유일하게 소득불균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패널의 전북지역 자료의 표본편의(sample bias)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표 13 > 전라북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4015	0.3484	0.3967	0.4077	0.4067	0.3825
99년	0.4103	0.3467	0.4059	0.4180	0.4007	0.3939
00년	0.4403	0.3836	0.4443	0.4450	0.4435	0.4246
01년	0.4255	0.4105	0.4296	0.4360	0.4366	0.4062
02년	0.4209	0.3954	0.4192	0.4262	0.4349	0.4175
03년	0.3936	0.3673	0.3987	0.4066	0.4055	0.3935
04년	0.3995	0.3997	0.4032	0.4090	0.4169	0.3932

< 그림 5 > 전라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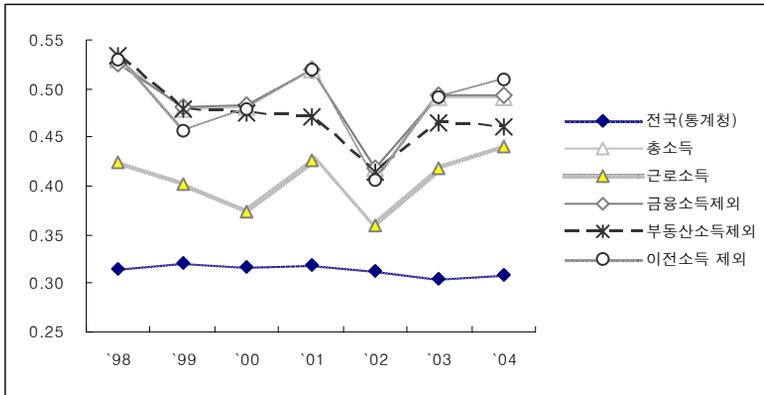


즉, 조사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표본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표본으로 선정되고 나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전체 도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7년 동안 부동산소득이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한가지로 표본 원가구 추출의 편의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은 향후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도별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 보조금은 2000년 이후 총소득의 불균형 수준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표 14> 전라남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5307	0.4250	0.5253	0.5333	0.5295	0.4557
99년	0.4799	0.4020	0.4817	0.4793	0.4573	0.4767
00년	0.4813	0.3727	0.4829	0.4744	0.4793	0.4467
01년	0.5189	0.4263	0.5186	0.4709	0.5205	0.5117
02년	0.4173	0.3590	0.4180	0.4145	0.4070	0.4158
03년	0.4920	0.4178	0.4932	0.4642	0.4920	0.4855
04년	0.4915	0.4411	0.4940	0.4616	0.5094	0.4945

<그림 6> 전라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있으며 그 효과도 차츰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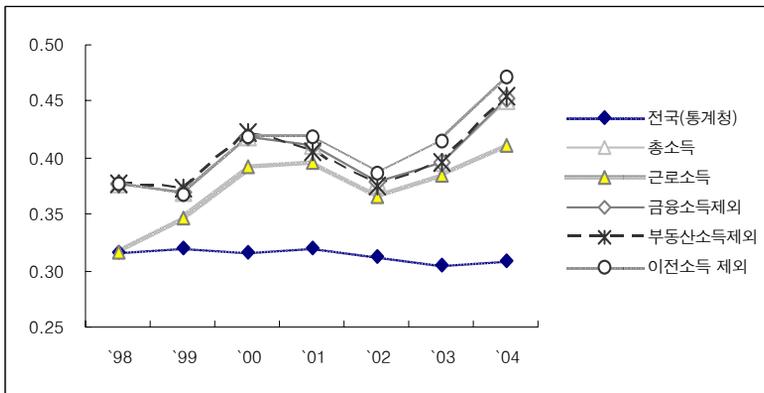
6) 전라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분석대상 도 지역 중에서 총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며, 근로소득의 불균형 정도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지니계수가 평균 0.4874로 강원도(0.4845)보다도 소득불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소득으로 전체 소득불균형 수준이 심화되는 것

< 표 15 > 경상북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3763	0.3163	0.3768	0.3776	0.3769	0.3620
99년	0.3695	0.3472	0.3698	0.3735	0.3672	0.3665
00년	0.4185	0.3921	0.4179	0.4230	0.4184	0.4036
01년	0.4115	0.3962	0.4109	0.4052	0.4184	0.4057
02년	0.3786	0.3663	0.3790	0.3759	0.3872	0.3685
03년	0.3962	0.3843	0.3961	0.3953	0.4148	0.3995
04년	0.4514	0.4113	0.4518	0.4537	0.4712	0.4381

< 그림 7 > 경상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 동안 부정적 효과가 급격하게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공적보조금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완화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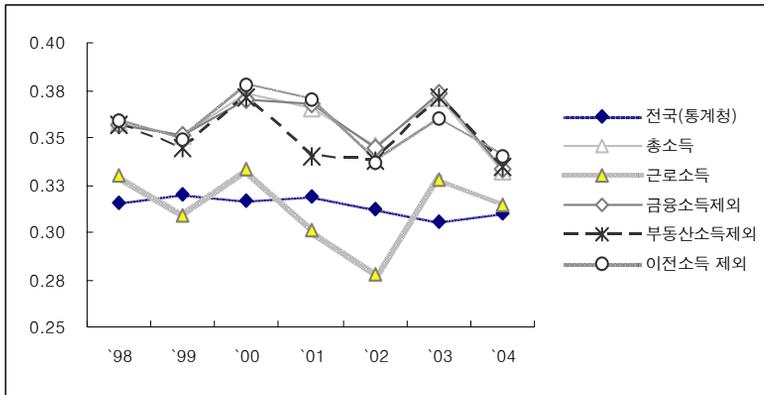
7) 경상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경상북도는 전라남도과 함께 최근 2년 동안 소득불균형 수준이 급격

<표 16> 경상남도 연도별·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제외	부동산소득 제외	공적 이전 소득 제외	기타 소득 제외
98년	0.3577	0.3304	0.3568	0.3564	0.3585	0.3588
99년	0.3508	0.3088	0.3516	0.3444	0.3493	0.3427
00년	0.3734	0.3336	0.3700	0.3714	0.3777	0.3634
01년	0.3657	0.3008	0.3680	0.3404	0.3703	0.3641
02년	0.3457	0.2780	0.3441	0.3379	0.3366	0.3256
03년	0.3710	0.3283	0.3735	0.3716	0.3600	0.3549
04년	0.3325	0.3146	0.3330	0.3341	0.3398	0.3325

<그림 8> 경상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변화 추이



하게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북도 근로소득의 불균형 수준이 다른 지역(도)보다 높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상북도에서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고용정책 중심의 정부정책의 효과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전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소득으로 전체 소득불균형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되어 전라북도와의 마찬가지로 표본편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은 2001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효과의 폭도 차츰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경상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경상남도의 소득불균형 수준은 지역(도)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석기간 동안 추세적으로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전체 소득불균형에 긍정적 요인으로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달리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소득의 경우에는 2002년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으나 최근 2년(2003년 및 2004년)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보조금을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추세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기에는 이 분석방법이 적합하지 않다.

6.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해 그 추세를 파악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문제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에 올바른 효과(소득불균형 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병행했다.

먼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도 지역의 총소득격차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 73%에서 최고 79%로 지역 내

불균형보다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총소득 기준(대우패널)으로 동일하게 분석한 김과 정(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였던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시기별로 지역 간 소득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다가 2002년부터 완화되고 있다.

지역 내 소득격차의 경우 다른 도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지역 내 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경기도의 지역 내 소득격차와 비교해볼 때 다른 지역의 지역 내 소득격차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총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양상이 매우 다르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충북·전남이며,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방향이 연도별로 다른 지역은 강원·충남·경북·경남이며, 특히하게 전북에서는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표본추출의 편의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과제로 미룬다.

금융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역은 강원·충북·충남이며, 전북·전남·경북·경남지역은 금융소득의 영향력이 연도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 그 추세를 명확하게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경기도에서는 금융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앞서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태도조사 결과로 미루어볼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경기도에서 소득계층별로 금융자산의 투자 및 보유가 더욱 보편화된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다양한 소득계층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동산자산소득의 경우와 대비된다.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단순하게 고용정책을 통해 해소하거나 국가(전국) 차원에서의 자산소득 재분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불균형 지표

를 하향안정화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즉, 자산소득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의 재분배정책보다는 부동산 소득의 재분배정책에 초점을 둔다거나 공적보조금의 효과가 분명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 시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 Abstract

Regional Income Inequality: The effects of Finance and real estate assets

Kim, Sung-Je

In Korea, alongside fast economic growth has come a new challenge: increasing income and regional disparity(inequality). Using KLIP(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paper examines trends in income and regional-8 provinces(Do)-disparity during 1998-2004.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ehind the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finance asset, real estate and public subsidies). Regional inequalities are very different by income sources and year by yea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reduce both income and regional inequalities, traditional policies had some effect nationally, but could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because the effect could be varied regionally.

Keywords: Regional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of Gini index,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inequality

참고문헌

권일·류상규. 2005.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국토계획》, 제40권 2호.

김의준. 2003.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이해와 지방 분산화 정책효과」.

봉인식. 2006. 「경기도내 지역 간 소득수준별 주거수준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_____. 2007. 「소비자 태도조사」. 2/4~4/4분기.

성현곤·김혜자. 2006.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한 영 서울대도시권 지방재정의 불균등도 추이분석」. 《국토계획》, 제41권 6호.

신관호·신동균. 2007.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1호.

신광영. 2006. 「세계화와 사회 양극화」. mimeo.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 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경제학회.

유경준. 2007. 「소득불균형도와 양극화」. KDI.

윤주현. 2006.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국토연구원.

윤주현 외. 2006.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_____. 2005.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임석희·이용우. 2002. 「Social Polarization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the Case of Seoul」.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정윤희·김의준. 2001. 「한국 지역소득격차의 분해」.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은행 경기본부. 2006. 「경기지역의 소득양극화 현황 및 시사점」.

현진권·강석훈. 1997.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46집 3호.

Athinson, B., L. Rainwater and T. M.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Branko Milanovic. 1999. "True world income distribution 1988 and 1993: First calculation based on household surveys alone." World Bank Report.

Castells. 1989. *The Informational City*. Blackwell Pub.

Dagum, C. 1997. "A New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Empirical Economics*, Vol. 22(4).

- _____. 2005.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gene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models." *Journal of Income Distributions*, Vol. 6(1).
- Duclos, J., J. Esterban and D.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 72.
- Esterban, J.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 Fujita, M and D. Hu. 2001. "Regional disparity in China 1985~1994: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 35, No. 3.
- Kim, E. J. and Jeong, Y. H. 2003.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 33, No. 2.
- Kim, Eun-Nan. 2006. "Information Occupation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in U.S. Metropolitan areas." Dissertation of Cornell University.
- Kim, Euijune, Sung W. Hong. and Soo J. Ha. 2003. "Impact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Policies on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Korea."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 37, No. 1.
- Michele Costa and Claudio Michelini. 1999.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mong Italian Households." *Discussion Paper* No. 99.11, Massey Univ.
- Mussard, S., F. Seyte and M. Terraza. 2003. "Decomposition of Gini and the Generalized Entropy Inequality Measures." *Economic Bulletin*, Vol. 4(7)
- Nembua, C. C. 2006. "A Note on the Decomposition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Squared: Comparing Entropy and Dagum's Methods." *Economic Bulletin*, Vol. 4(8).
- Wolfson. 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2).